

정치권 '공정 사회' 후폭풍 촉각

“특혜 배제...법과 원칙 엄격 적용” 환영

여 “소급적용 국정 부담...공정한 기준 제시를”

야 “정부·여당 사정정국 조성될까 심히 우려”

이명박 대통령이 제시한 '공정 사회'라는 화두의 후폭풍이 여야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다. 특히 일부 각료 후보자들의 나카와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받은 유영환 외교통상부 장관의 사퇴가 이 같은 기준의 연장선으로 해석되면서 '공정 사회'는 여의도의 키워드로 급부상했다. 여야 의원들은 원칙적으로 특혜를 배제하고 법과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겠다는 의미가 담겼다고 해석하며 일단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사회가 먼저 참람하고 투명해야 하고 출신 수범해야 한다는 게 대통령의 뜻"이라며 "앞으로 그 기준이 더 엄격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여권 일각에서는 이 메시지가 과거의 행위까지 소급 적용되며 오히려 국정 운영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공정에 대한 기준이 시급하다는 건의가 나오고 있다. 야권에서는 정부·여당의 출신수범을 요구하는 목소리와 함께 갑작스럽게 사정(司正) 정국이 조성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기류도 나타나고 있다. 또 여권에서는 이 같은 분위기를 정책으로 연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타나고 있다. 한나라당 홍준표 최고

위원은 최근 "대학 입시제도는 출발의 공정성에 관련돼 있는 만큼 점검이 필요하다"고, 정두언 최고위원은 "공정한 교육기회 차원에서 입학사정관제 확대 실시는 재검토돼야 한다"고 각각 밝혔다. <사정(司正) 태풍 전조인가>=집권 후반기 공직기강을 다잡기 위한 수단으로 '공정 사회'가 활용되며 결국 사정 한파가 부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대두되고 있다. 특히 야당에서는 '표적사정'에 대한 경계감이 감지되고 있다. 민주당 박지원 비대위 대표는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대통령이 연일 공정한 사회를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청와대와 이 정부, 권력이 공정하지 못한 것에 문제의 초점이 있다"며 "대통령과 정부·여당부터 공정한 사회를 위해 출신수범할 때 국민이 수긍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사정의 칼날도 야당으로만 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친박(친박근혜) 진영의 한 의원은 "자칫 잘못하면 사정정국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고, 특정인에 대한 탄압이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라고 전망했다. <부메랑 될까>=여야 모두 공정사회 메시지가 자칫 부메랑으로 돌아올까봐 '집안 단속'에 부심하고 있다. 한나라당 정두언 최고위원은 전날 공정 사회에 대해 "분명 시의적으로 적절하나 오히려 현 정부의 골목에 작용하는 측면이 있다"며 야당의 대(對)공격 수단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감을 나타냈다. 민주당도 지난주 강성종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에 협조한 데 이어 "내부에 문제가 생기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원칙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국무위원 후보·내정자에게 들이댄 엄격한 잣대가 자신들에게 되돌아올 수 있다는 인식이 엮보인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유명환 딸' 노골적 특혜 확인

행안부 "응시 사실 알고 관계 법령 위반"

외교통상부가 특혜 공모에 지원한 유명환 장관 딸이 합격할 수 있도록 노골적인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는 6일 특별인사 감사 결과 발표를 통해 "외교부가 유 장관 딸이 특혜에 응시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장관 딸을 합격시키려고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다섯 명의 면접위원 중 외부 위원 세 명은 유 장관 딸이 아닌 다른 응시생에게 더 높은 점수를 줬지만, 면접에 참여한 한총희 인사기획관 등 외교부 간부들은 유 장관 딸에게 면접에 가까운 점수를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앞서 면접위원을 구성에서도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보통 면접관 등 시험위원은 신규 인원을 필요로 하는 기관장이 결정하게 돼 있지만 이번 특혜 때는 한 기획관이 내부 결재 등 절차를 무시하고 마음대로 시험위원

을 정했다. 또 한 기획관은 유 장관 딸이 시험에 응시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시험위원을 선정하는데 그치지 않고 직접 서류전형과 면접 등에 참여한 것이다. 시험 관리 면에서도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다. 우선 '공무원임용자격 운영 지침'에 따르면 응시자격 범위는 특급 확대하게 돼 있지만 이번 특혜는 종전과 달리 자격 범위를 축소했으며 어학 요건도 유 장관의 딸에 유리하게 적용했다. 또한, 통상(通商) 관련 법적 분쟁 등을 다루는 FTA(자유무역협정) 담당자를 선발하는데 업무 연관성이 높은 변호사는 배제하는 대신 '석사 후 2년 경력자'를 추가하는 등 일관되지 못한 측면도 드러났다. 행안부는 유 장관 딸에게 특혜를 준 외교부 인사 담당자에 대해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맹형규 행정안전부장관이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의 딸 특별채용 논란으로 불거진 특례제도와 관련, 6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행안부 기자실에서 개선방향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한나라 "특채 비율 줄이겠다"

행시 개편안 재검토

한나라당은 6일 정부가 발표한 행정고시 개편안을 재검토한다는 원칙 아래 향후 당정협에서 특채 채용 비율 감축 등 구체적인 조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의 딸 특별채용 논란으로 행정고시 개편안이 쟁점현안으로 부각되자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

고위 비공개 회의에서 행시개편안 보완대책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별채용 제도가 특수계층 자녀의 취업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만큼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나라당은 특히 행시개편안 중 외부전문가를 필기시험 없이 서류전형과 면접만으로 정원의 최대 50%까지 선발하는 '5급 전

문가 채용시험'에 대해선 비율을 30~40%로 축소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안상수 대표는 이날 "고시와 특채 비율의 급격한 확대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지금 고시와 특채 비율을 50%대 50%로 한다고 하는데 그 비율을 70%대 30%나 60%대 40% 정도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북구 풍향동·두암 3동 구간 경계조정이 급한 이유?

인구 감소 동구엔 절대적 필요 사업·정책 추진 재원 마련길도

갑수족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동구의 최대 현안은 북구의 풍향동과 두암 3동을 끌어들이는 일이다. 북구와의 경계조정을 통해 이들 2개 동을 편입해이만 국회의원을 뽑을 수 있는 10만4000명(2008년 기준)을 넘길 수 있기 때문이다. 단순히 국회의원이 없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사업·정책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자체 재원의 감소 및 외부 의존도 심화, 인구 유출 등의 문제점도 불거질 수밖에 없다. 동구는 이미 자체 수입(지방세+세외 수입)으로는 직원 인건비도 감당하지 못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을 제기했다. 당시 동구는 광주시의 구간 경계가 지난 95년 광산구의 서창출장소와 대촌출장소가 각각 서구와 남구로 편입·조정된 이후 10년 이상 됐으며, 지역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신도시 개발로 인해 인구가 감소했다는 점을 그 이유로 들었다. 동구는 직원들을 동원해 편입 대상으로 거론된 풍향동과 두암3동 주민들에게 일일이 설득작업에 들어가고 광주시도 이에 긍정적이었으나 결국 무산됐다. 2007년 손재홍 의원의 발의로 자치구간 경계 조정을 논의할 수 있는 특인 '광주시 지역균형발전 조례'까지 제정됐지만 정치권의 복잡하게 얽힌 이해관계를 넘어서지 못했다. 당시 박광태 전 시장은 "표를 계산하는 사람 때문에 구 간 경계조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발언할 만큼 지역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은 서로 자신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계산했다.

<구간 경계 조정'만이 실질' 동구의 인구는 매년 3000~5000명이 빠져나가고 있다. 노후 단독주택에 대해 꾸준한 재개발하고 있으나 원주민 유출은 계속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건설 불경기, 미분양 등으로 아예 재개발 수요도 없는 실정이다.

또 도시정책이 20~30년 전부터 신도시 개발에만 치중되고 구도심에 대한 투자가 이뤄지지 못하면서 도로나 공원 등 기반시설은 턱없이 부족해졌다. 이는 당연히 구도심의 인구 유출로 이어졌다. 지난날 말 현재 동구의 인구는 10만1613명. 자치구 간 경계조정 문제가 최초 불거진 지난 2006년과 비교해도 1만4000여 명이 사라졌다.

이 같은 위기에 동구가 내놓을 수 있는 카드는 이미 4~5년 전 무산된 바 있는 북구의 일부 동을 가져오는, '자치구 간 경계조정'밖에 없었다. 동구가 편입 대상으로 삼은 풍향동과 두암 3동의 현재 인구는 각각 8401명, 2만1453명으로 모두 2만9864명이다. 이에 반해 북구의 인구는 지난날 말 46만7782명으로 전체 광주시 인구(144만2029명)의 32.44%를 차지하는 거대 자치구이기 때문에 북구에서 인구를 빼어오는 방안이 다시 부각될 것이다. <과거 경계조정 논의 왜 무산됐나>= 동구는 인구 11만명 선이 위태로웠던 지난 2006년 말 자치구 간 경계 조정을 처

각 자치구나 정계에서는 광주의 균형발전을 위해 구간경계조정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으나 세부사항으로 들어갈 경우 각 자치구의 입장만을 고수하는 상황이 반복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동구의 인구 및 면적 증가를 위해서는 지난 4년 전에 실패했던 경계 조정 대상이 되는 동 주민들의 동의, 지역 국회의원 및 지역의원 등 정치권의 합의, 자치구 간 마찰 최소화 등의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각 자치구나 정계에서는 광주의 균형발전을 위해 구간경계조정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으나 세부사항으로 들어갈 경우 각 자치구의 입장만을 고수하는 상황이 반복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동구의 인구 및 면적 증가를 위해서는 지난 4년 전에 실패했던 경계 조정 대상이 되는 동 주민들의 동의, 지역 국회의원 및 지역의원 등 정치권의 합의, 자치구 간 마찰 최소화 등의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주민 동의 후 정치권 합의>=강남대 광주시장이 6일 민선 5기 첫 동구 순방에서 '자치구 간 경계 조정'방향을 밝혀 4년 만에 다시 이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하지만 동구의 인구 및 면적 증가를 위해서는 지난 4년 전에 실패했던 경계 조정 대상이 되는 동 주민들의 동의, 지역 국회의원 및 지역의원 등 정치권의 합의, 자치구 간 마찰 최소화 등의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바이블칼리지 신(편)입생 추가 모집. GWANGJU BIBLE COLLEGE & THEOLOGICAL SEMINARY. 학부 및 신대원(M.Div.)과정. Th. M.(신학석사) 과정 개설. 1년에 최단기 학위과정 완성. 최고의 교수진, 학비 저렴, 진로 보장. 세련사회교육원 후원.